

법무사 제1차 시험대비

# 시대에듀 법무사 실전 모의고사

<제 1교시>

|      |      |   |
|------|------|---|
| 문제책형 | 시험과목 | 제1과목 (헌법, 상법) : 50문<br>제2과목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50문 |
| ①    |      |   |

## 응 시 자 준 수 사 항

1. 문제책을 받더라도 시험시작 시간까지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안됩니다.
2. 문제책을 받는 즉시 과목편철 순서, 문제누락 여부, 인쇄상태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 후, 답안지의 문제책형란에 본인의 책형을 표기합니다.
3.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답안만을 선택하여 표기하여야 하며, 문제내용에 관하여 질문할 수 없습니다.
4. 시험시간 종료 후 문제책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 시험시간이 종료되기 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문제책을 시험장 밖으로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 공 지 사 항

공개되는 정답에 이의가 있는 응시자는 시대에듀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sdedu.co.kr/>)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1. **이의제기** : [시대에듀 홈페이지 / 동영상 강의 내용 및 학습 질문]  
- PC(컴퓨터) : 시대에듀 강의 재생 플레이어 창 > 우측 [학습질문]  
- 모바일 : 시대에듀 앱 > 내강의실 > 강좌명 터치 > 커리큘럼 선택 후 상단의 [학습질문]

담당 부서에서 확인 후 답변드리고 있으며, 답변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시일이 소요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2. **최종정답 공개** : [시대에듀 홈페이지 / 강의자료실]에 게시

【헌 법 20문】

【문1】 저항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에 의함)

- ① 저항권은 자연권으로 발전되었고, 영국의 대헌장, 미국의 독립선언서, 프랑스의 1789년 인권선언에서 실정화되었으나,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저항권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 ② 저항권은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 회복 뿐만 아니라 집권이 라는 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다.
- ③ 국회법 소정의 협의 없는 개의시간의 변경과 회의일시를 통지하지 아니한 입법과정의 하자는 저항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④ 재판권 행사가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저항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⑤ 저항권이론을 재판의 근거규범으로 채용, 적용할 수 없다.

【문2】 직업공무원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에 의함)

- ① 직업공무원제도는 공무원이 집권세력의 논공행상의 제물이 되는 엽관제도를 지양하며 정권교체에 따른 국가작용의 중단과 혼란을 예방하고 일관성 있는 공무수행의 독자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 되도록 하는 공직구조에 관한 제도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보장을 그 중추적 요소로 한다.
- ② 직업공무원제도의 운영 및 기본적 요소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임용·보직·승진에는 공무원의 능력·성적·전문성 등을 반영한 능력주의·성과주의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 ③ 공무원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교육감에게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 ④ 동장을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으로 분류한 것은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⑤ 헌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공무원과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공무원이 일치하지는 않는다.

【문3】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 ① 외국인에게 직장 선택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직장 선택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② 근로의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에는 국가에 대하여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근로자가 기본적 생활수단을 확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루어져 있다. 모두 근로의 권리이므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그 기본권 주체성을 모두 인정함이 타당하다.
- ③ 의료인의 면허된 의료행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이 제한하고 있는 직업의 자유는 인간의 권리에 해당한다. 외국인도 국가자격제도에 관련된 평등권에 관하여 따로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 ④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재판청구권 등에 관하여는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 ⑤ 한국영화인협회 감독위원회는 그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능력이 있다.

【문4】 헌법 제10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 ①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행복추구권 속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포함되고, 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계약 체결의 여부, 계약의 상대방, 계약의 방식과 내용 등을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할 수 있는 계약의 자유가 파생된다.
-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하여 부정 취득하지 않은 운전면허까지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다 할지라도 운전면허 소유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 ③ 헌법 제10조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은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을 전제로 하는데,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행위 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자기결정권이 포함되어 있다.
- ④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타인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 ⑤ 초등학교 정규교과에서 영어를 배제하거나 영어교육 시수를 제한하는 것은 학생들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제한하나, 이는 균형적인 교육을 통해 초등학교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 영어 과목에 대한 지나친 사교육의 폐단을 막기 위한 것으로 초등학교생들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문5】 평등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 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절도 사범에 관한 가중처벌 규정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1.6. 법률 제 13717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5항 제1호는 불법성의 정도가 같다고 보기 어려운 형법상 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를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이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② 혼인 중인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에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의무를 모에게만 부과하고, 남편 아닌 남자인 생부에게 자신의 혼인 외 자녀에 대해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생부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③ 균형법이 형법상 강제추행죄나 준강제추행죄 등과 달리 강제추행죄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 ④ 공익근무요원의 경우와 달리 산업기능요원의 군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으로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산업기능요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⑤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신청보증금이 매수인의 대금미납으로 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고에 귀속하지 않고 배당재원에 포함시키는 것과 달리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에서 매각결정을 받은 매수인이 기한 내에 대금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그 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규정한 국세징수법 조항은 국세징수절차와 민사집행절차의 성질이 다르므로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에 해당한다.

【문6】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 ①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결사의 자유라 함은 다수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으로, 결사의 자유에서 말하는 결사란 의사에 기하여 결합하고 조직화된 의사형성이 가능한 단체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법상의 결사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② 우리 헌법은 제2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 ... 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현대 자유민주주의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으로 언론·출판의 자유를 강력하게 보장하고 있으며, 광고물이 상업적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라도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호를 받는 대상이 될 수 있다.
- ③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한다.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주요행위는 집회의 준비 및 조직, 지휘, 참가, 집회장소·시간의 선택이다. 따라서 집회의 자유는 개인이 집회에 참가하는 것을 방해하는 집회의 자유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금지하는 것으로 족하다.
- ④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것이어야 한다.
- ⑤ 국가가 수형자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하면서 국법질서나 헌법체제를 준수하겠다는 취지의 준법서약서 제출을 요구한 조치는 양심의 영역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다.

【문7】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회부조와 같이 국가의 일방적인 급부에 대한 권리는 재산권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 ② 보안거리에 저촉되는 화약류저장소에 대한 시설이전명령 때문에 화약류저장소를 이용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상실되는 영리획득의 기회를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재산권으로 보기는 어렵다.
- ③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형성된 구체적인 재산권의 이용을 제한하는 공용 제한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조치가 헌법 제23조 제3항을 위반하여 개성공단 투자기업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④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반드시 보호자를 동승하도록 하는 조항은 동승보호자의 추가 고용에 따른 비용 지출을 유발할 뿐 학원의 영업방식을 직접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동승조항으로 인해 직업수행의 자유는 제한되지 아니한다.
- ⑤ 새마을금고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그 선고받은 벌금액수에 상관없이 해당 임원이 당연퇴임되도록 규정한 새마을금고법의 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문8】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판결주문에 영향이 없는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판단이 누락된 경우에는, 판결주문에 간접적으로만 연관되는 판단이유가 누락된 경우와 달리 재심의 소를 통하여 기판력 등 확정된 판결의 효력을 배제하는 것을 허용해야 할 만큼 정의의 요청이 절박하다고 할 수 없다.
- ② 재판에 대한 불복기간의 제한은 입법자가 상소심의 구조와 성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재량의 문제이므로, 즉시항고 제기기간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은 1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형사소송법이 그 절반가량인 3일로 규정한 것은 상대적으로 신속한 확정이 필요한 형사재판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차별취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 ③ 재심은 판결에 대한 불복방법의 하나인 점에서는 상소와 마찬가지로이기 때문에 상소와 비교하여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④ 재판청구권의 보장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 아닌 자에 의한 재판이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재판을 받지 아니하는 측면만 만족하면 족하다.
- ⑤ 법원이 직권으로 치료감호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재판청구권의 적극적 측면은 물론 소극적 측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스스로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직권으로 치료감호를 선고받을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문9】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와 헌재결정에 의함)

- ①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것이라면 그 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② 대법원은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 ③ 형사보상청구권에 관한 헌법 제28조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재산권의 침해에 대하여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과는 차이가 있다.
- ④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 ⑤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문10】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와 현재 결정에 의함)

- ① 최저임금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상 근로의 권리로서 바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 ② 급식활동이 의무교육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교육과정이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가 의무교육의 실질적인 균등보장을 위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항목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한 모든 재원마련도 전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몫이 되어야 하므로 급식에 관한 경비를 전면무상으로 하지 않고 그 일부를 학부모의 부담으로 정하고 있는 법률조항들은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배된다.
- ③ 환경권은 명문의 법률규정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면 환경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 ④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혼인과 가족에 대한 제도를 보장한다.
- ⑤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 바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법 등 관련 법률이 구체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로소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문11】 국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으며,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직접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 의결할 수는 없다.
- ②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 ③ 국회의 의사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혐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국회 의사절차의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하고, 국회법 제130조 제1항은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을 때 그 사유 등에 대한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았거나 국정조사결과나 특별검사의 수사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다고 하여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④ 국회의원만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 ⑤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헌법상의 권한이자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 각자에게 모두 보장되는 것이다.

【문12】 국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현재 결정에 의함)

- ① 헌법 제65조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 위반이나 법률위반에 대하여 탄핵소추의 가능성을 규정함으로써, 그들에 의한 헌법위반을 경고하고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을 하며, 국민에 의하여 국가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시 그 권한을 박탈하는 기능을 한다. 즉, 공직자가 직무수행에 있어서 헌법에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탄핵심판절차의 목적과 기능인 것이다.
- ② 탄핵소추를 받은 자가 임기만료로 퇴직하여 더 이상 공직을 보유하지 않게 되었다면 탄핵심판에서의 피청구인자격을 상실하여 심판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③ 국가기관이 국민에 대하여 공권력을 행사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법원칙으로 형성된 적법절차의 원칙을 국가기관에 대하여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소추절차에 직접 적용할 수 없다.
- ④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 ⑤ 국회의원은 국회의 조약에 대한 체결·비준 동의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대통령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문13】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회의 재의결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 ② 우리나라는 회기계속의 원칙, 국회의 폐회 중의 환부의 인정,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않으면 법률로서 확정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보류거부는 인정되지 않는다.
- ③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 ④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⑤ 헌법에는 명문상 거부권 행사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법률안 거부권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거부권의 행사는 정당한 사유와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문1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현재 결정에 의함)

- ①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도 합법성 감사 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감사를 할 수 있다.
- ② 우리 헌법이 대통령중심제의 정부형태를 취하면서도 국무총리제도를 두게 된 주된 이유는 대통령의 강력한 권력을 견제하기 위함이다.
- ③ 대통령의 직무상 해외 순방 중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루어진 정당해산심판청구서 제출안에 대한 의결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필수적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보아야 하는지는 국무회의에 의안을 상정할 수 있는 권한자인 대통령이나 국무위원에게 일정 정도의 판단재량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에 관한 대통령이나 국무위원의 일차적 판단이 명백히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인 것이 아닌 한 존중되어야 한다.

【문15】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현재 결정에 의함)

- ①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서 설립된 인권 보호기구이자 독립된 국가기관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에 해당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게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②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므로 대한민국의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③ 국가인권위원회의 청원권 침해 진정사건 각하결정은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
- ④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급·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와,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즉 피해자이어야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 ⑤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는 모두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문16】 법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현재 결정에 의함)

- ① 대법원이 법원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단심으로 재판하는 경우에는 사실확정도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여 법원에 의한 사실확정의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원에 대한 대법원장의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대법원에 의한 단심재판에 의하도록 한 것은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 ③ 헌법은 직접적으로 심급제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정한 재판이 되려면 3심제로 운영되어야 한다.
- ④ 헌법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여 대법원이 모든 사건을 상고심으로서 관할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원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 ⑤ 대법원이 제정한 규칙은 법규명령이다.

【문17】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현재 결정과 판례에 의함)

-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국가작용이므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 ② 법원은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사법권의 내재적인 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되어 심사할 수 없다.
- ③ 서훈취소는 수여된 서훈을 취소하는 것이므로 서훈수여의 경우와 동일하게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해당한다.
- ④ 지방의회의 의원징계의결은 국회의원의 징계와 동일하게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 ⑤ 사법기관인 법원이 계엄선포 요건의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심사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인 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되어 적절한 바가 못 된다.

【문18】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현재 결정에 의함)

- 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헌법에 의하면 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 ③ 피청구인이 선출하여 임명된 재판관 중 공석이 발생한 경우 국회는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 ④ 헌법재판소에서 행하는 심판은 헌법재판소장이 재판장이 되는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재판부에서 관장하여야 한다.
- ⑤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기망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취하였다면 이는 무효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를 임의로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문19】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이견이 있으면 현재 결정에 의함)

- ① 탄핵심판·정당해산심판·권한쟁의심판·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심판은 정당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두 구두변론에 의하여야 한다.
- ② 헌법재판소법은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에 대하여만 가치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서 가치분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 ③ 헌법재판소법은 법률의 위헌결정,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에 대하여만 기속력을 명시하고 있다.
- ④ 한정위헌결정에 표현되어 있는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에 관한 견해는 법률의 의미·내용과 그 적용범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견해를 일응 표명한 데 불과하여 기속력을 가질 수 없다.
- ⑤ 헌법재판은 그 심판의 종류에 따라 그 절차의 내용과 결정의 효과가 한결 같지 아니하기 때문에 재심의 허용 여부 내지 허용 정도는 심판절차의 종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헌법소원심판에서는 재심이 허용된다.

【문20】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견이 있으면 현재 결정에 의함)

- ①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재판이라 함은 판결·결정·명령 등 그 형식 여하와 본안에 관한 재판이거나 소송절차에 관한 재판이거나를 불문하며 심급을 중국적으로 종결시키는 중국재판뿐만 아니라 중간재판도 이에 포함된다.
- ② 가족이 북한 내 정치범수용소에 억류되어 있는 북한이탈주민 등이 이른바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계속 중에 국회가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였다면, 더 이상 권리보호이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헌법적해명의 필요성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당’의 명칭이 정당법에서 금지하는 유사명칭에 해당하여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공표한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지만,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 ⑤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감사대상을 특정하여야 하나, 특정된 감사대상을 사전에 통보할 것까지 요구된다고 볼 수는 없다.